

BUSINESS

한국형 비실시기업과 비즈니스 모델

제1장 서론

지식기반시대라 지칭되는 21세기도 벌써 10년이나 흘렀고, 국제 정치·경제·사회 분야에서도 지식에 기반을 둔 다양한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자신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는 않지만 다량의 지식재산, 특히 수많은 특허를 매입한 후 이를 제조업체에 라이선싱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제조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여 상당한 이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을 둔 특허괴물 (patent troll) 또는 비실시기업(non-practicing entity, NPE)의 등장이다. 예측한 바와 같이 산업자본시대의 제조업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이윤을 창출해온 선진국의 다국적 제조업체들은 물론 이제야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은 다양한 비실시기업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 당했다. 따라서 미국 제조업체는 물론 우리나라·일본·중국의 제조업체들도 비실시기업에 대항할 수 있도록 자국의 의회에 특허법 개정을 요구한지 오래다.

우리나라 수출역군인 대기업들이 세계 비실시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당하기 시작한 시점은 우리 대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기 시작한 시점과 대략 일치한다. 따라서 지난 7-8년 간 우리 대기업들은 Interdigital, Forgent Networks 등을 포함한 다양한 비실시기업으로부터 수많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당하여 왔다. 때론 우리 대기업들이 이기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경우 이들이 내미는 원천특허 앞에 무릎 꿇고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거나, 소송을 불사하며 버티다가 막대한 침해보상금을 지불하고 끝내기가 일수였다. 그러다 보니 2008년 10월 본인이 지사장으로



로 일하던 미국 비실시기업의 한국 지사인 Intellectual Ventures Korea가 정식으로 출범하여 국내 우수 대학교의 발명가들로부터 발명을 매입하기 시작하자 우리 대기업들은 물론 정부까지 우리나라의 발명이 국외로 '유출' 될 가능성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었다. 일부 오피니언 리더들은 이제 우리나라도 자본을 축적하여 토종 비실시기업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로부터 약 1년 후인 올 9월15일, 드디어 한국형 창의자본회사인 'Intellectual Discovery' ('(주) 창의자본'으로 약칭)가 공식 출범하였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주)창의자본의 총 자산은 5,000억원 규모이며, 이 중 40%는 정부가, 나머지 60%는 민간이 출자할 예정이라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민간 출자자들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기업들이며, 또한 그 분야도 전자·IT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주)창의자본은 명실공히 '대한민국창의자본' 주식회사라 불릴만하다. 성격상으로 보면 본질적으로 보면 (주)창의자본 역시 비실시기업이다.

우리는 (주)창의자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원초적 본능에 입각하여 무조건 쌍수를 들고 (주)창의자본을 환영하여야 하는가? 불륜과 로맨스와는 관계없이 (주)창의자본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서 과연 우리나라에 비실시기업은 필요한가?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비실시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이어야 하며 우리의 비실시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본 기고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식기반시대 및 우리나라의 IP 산업 현황을 살펴본 후 지식기반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에 대하여 조명해 보며¹⁾, 이에 기초하여 한국형 비실시기업이 추구해야 할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2장 지식기반시대의 도래와 우리의 갈 길

많은 이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지식기반시대라 부른다. 2003년도 Brookings Institute의 연구 조사에 의하면 미국 S&P 500 기업의 자산 중 무형자산 비중은 1982년에는 38%에 불과하였지만, 10년 후인 1992년에는 62%로 증가하였고, 다시 10년 후인 2002년에는 80%까지 증가하였다²⁾. 이는 지식기반시대에서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또는 IP)의 중요성을 가늠케 하는 객관적 통계 자료인 동시에 지식기반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의 갈 길을 조명해 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표 1. 미국 S&P 500 기업의 자산 변동 추이
(Brookings Institute 연구 조사, 2003)

구분	유형자산	무형자산
1982년	62%	38%
1992년	38%	62%
2002년	20%	80%

석학들이 말하는 인류문명 발전사는 크게 3단계로 요약된다. 2,000년간 지속된 농경시대에는 영토가 넓은 왕국이 세계를 호령하였고, 향후 200년간 지속된 산업자본시대에는 자본이 풍부한 자본가가 시장을 지배하였지만, 작금의 지식기반시대에는 IP를 많이 보유한 국가가 세계를 주도할 것이라고 한다. 자랑할 것 이라고는 똑똑한 국민밖에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작금의 지식기반시대의 IP 중심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소화, 활용하여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혹자는 지식기반시대의 도래가 인류문명 발전에 의한 필연적 결과라고 설명하나,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198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들의 비약적 발전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잃어가던 선진국들은 자신들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먹거리를 새로이 개발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 먹거리의 필수조건은 자신들은 많이 보유하고 또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되, 개발

1) 제2장부터 제6장까지의 '지식기반시대' 및 '우리나라의 IP 산업 현황' 등은 저자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발간할 예정인 '기술사업화매거진'에 기고한 원고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을 밝힌다.

2) Creating strategy-focused organizations, David P. Norton, July 7, 2003.

도상국은 보유량도 적고 이를 창출할 능력도 부족해야만 했다. 20세기 후반 선진국들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 먹거리로 선택한 것이 특허, 저작권 등으로 대표되는 지식재산, 바로 IP가 아닌가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지식기반시대는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 농경시대처럼 2,000년, 아니면 산업자본시대처럼 200년? 필자의 생각에 따르면 선진국들이 IP를 월등히 많이 보유하며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 지식기반시대는 수십 년, 수백 년간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의 IP 보유량 및 IP 창출능력이 선진국에 육박하게 되거나 또는 외제인과의 해후로 각국의 IP 보유량 및 IP 창출 역량이 평준화될 경우 선진국들은 지식기반시대에서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IP가 아닌 다른 형태의 차세대 먹거리를 개발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고구려, 발해를 떠나보낸 후 좁은 한반도에서 부대끼다 2류 국가 신세를 면치 못하였고, 근래에는 국수주의의 발호로 산업자본시대의 문호 개방을 거부하다가 3류 국가로 전락하여 수십 년을 남에게 모질게 휘둘리며 살아왔다. 우리나라는 수년 전 선진국 반열에 이르는 듯 하였으나, 아직도 그 문턱에서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지식기반시대의 IP 중심 패러다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산업자본시대의 제조업 중심 패러다임에서 해매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기반시대를 맞이한 우리의 갈 길은 자명하다. 지금부터라도 범국가적으로 산업자본시대의 제조업 중심 패러다임으로부터 지식기반시대의 IP 중심 패러다임으로 발상을 전환하여 지식기반시대의 진정한 선진국으로 안착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IP 보유량 및 IP

창출능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지식기반시대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IP 창출 능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에 알맞은 IP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론을 범국가적으로 개발, 추진하여야만 할 것이다.

제3장 지식기반시대의 우리나라는 진정한 '특허강국' 인가?

1. 무늬만 특허강국

정답은 '아니다'이다. 정량적 수치만 보면 '아니다'가 '아니다'인 듯하다. 하지만 모든 정황적 증거를 종합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특허강국'이 진정하게 아님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우리나라가 진정한 '특허강국'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우리를 '특허강국'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반문한다. 일례로 우리나라는 2006년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출원 건수에서 7,061건을 기록하여 52,280건의 미국, 27,731건의 일본, 18,134건의 독일에 이어 세계 4위의 특허강국 자리를 거머쥐었고, 국제특허출원 증가율에서는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³⁾ 이러한 양적 팽창 덕에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는 한국어를 '국제 공개어'로 공식 채택하였다.⁴⁾ 2007년에도 우리나라의 PCT 특허출원 건수는 18.8% 증가하여 중국의 38.1%에 이어 세계 2위의 성장세를 보였다.⁵⁾ 2008년 "WIPO 특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건수에서 일본의 51만 건, 미국의 39만 건에 이어 17만 건으로 세계 3위를 차지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WEF(World Economic Forum)은 '2008년 국가별 경쟁력 평가보고서'에서 "한국은 거시경제 안정성과 매우 혁신적 비즈니스 부문 등에 힘입어 강력한 위상을 확보했다"면서, 세부 항목별로는 예대마진(3위), 정부 첨단기술제품 구매(2위), 대학등록률(3위), 정보통신 관련법령(3위), 기업의 R&D 지출(7위), 일반적 발명 특허(7위) 등을 차지하였다고 발표하였다.⁶⁾ 특허청이 발간한 '2009 지식재산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가별 PCT 특허출원 건수에서 53,521건의 미국, 28,744

3) 공감코리아 'CNN도 극찬한 '기술 한국'...로열티 버는 나라로'(2007년 12월 31일)

4)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IPO 제43차 총회(2007년 9월 28일)

5) 한국경제매거진 '양보다는 질... 돈 되는 특허에 올인'(2008년 7월 15일)

6) 스위스 제네바 소재.

건의 일본, 18,428건의 독일, 8,867건의 프랑스에 이어 5번째로 많은 7,908건을 출원하였으며, 이는 2003년 2,942건의 2배 이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진정한 '특허강국'이 아닌 사실은 해마다 늘어나는 해외로열티 지급액 및 로열티수지 적자(즉 해외로열티 지급액 - 해외로열티 수입액)가 단적으로 증명한다. 실제로 2000년에는 30억 달러 정도이던 해외로열티 지급액이 2007년에는 5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에 따라 로열티수지도 20억 달러 적자에 도달하였다.⁷⁾ 하지만 금년에는 기존의 해외로열티 지급액 및 로열티수지 적자 기록을 현격한 격차로 모두 싹 잡아치울 전망이다.

2. 수출할수록 손해인 우리나라의 IP 산업

도대체 왜 해마다 우리나라의 해외로열티 지급액은 증가하고 로열티수지 적자는 늘어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는 IP에 기반을 두지 않은 채 수출 기록을 매년 갱신해왔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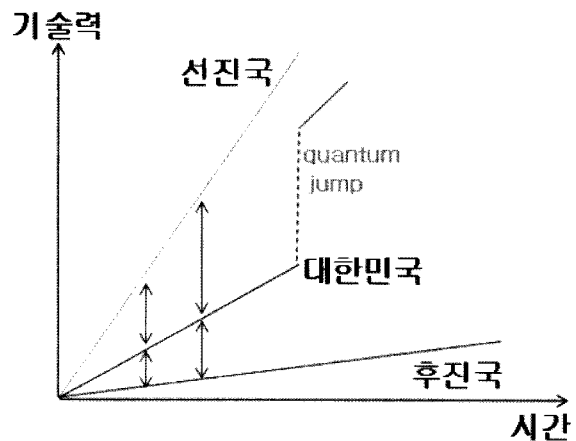
2008년도 MBC 보도에 따르면 1990년 이후 반도체, 휴대폰 등 수출상위 5개 품목의 수출량과 해외로열티 지급액의 상관계수는 0.82로 나타났다고 한다.⁸⁾ 즉 수출액이 '100' 늘어나면 우리가 해외에 지급하는 로열티도 거의 같은 수준인 '82'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2010년 들어 로열티수지는 더욱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 해외로열티 지급액은 사상 최초로 40억 달러를 넘어섰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 연말 해외로열티 지급액은 건국 이래 최초로 10조원을 가뿐히 돌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로열티수지도 단군 이래 최악의 적자폭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행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상반기 국내 업체가 외국에 지불한 로열티는 총 40억 달러에 이른다.⁹⁾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6억 달러에 비해 약 50% 이상 급증한 액수이며, 2006년 연간 해외로열티 지급액인 46억 달러와 거의 맞먹는 수치이다.

물론 수출을 한만큼 우리나라가 부강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0.82'에 달하는 수출량 대비 로열티 지급 상관계수를 유지하는 한, 우리는 기울인 노력만큼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남 좋은 수출만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그 동안 우리가 해왔던 일이다. 그렇다고 수출한 만큼의 혜택을 누릴 수 없으니 수출을 포기하자는 말은 아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말이다. 수출을 하더라도 IP를 기반으로 만든 제품을 수출하여 우리도 기울인 노력만큼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라져야 한다는 말이다.

내년에는 사정이 나아질까? 그림 1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quantum jump가 없는 한, 우리의 미래는 예측 가능한, 과거의 연장일 뿐이다. 내년에도 우리나라는 올해보다 더 많이 수출할 것이다. 하지만 각고의 인내와 노력이 따르지 않는 한 우리가 수출하여 창출한 수익의 대부분은 다른 나라가 차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의 내년도 해외로열티 지급액은 올해보다 더 증가할 것이고, 로열티수지 역시 올해보다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했던 과거는 우리의 미래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바로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예측 가능한 우리 미래이다.

그림 1.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커지는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기술력과 이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quantum jump의 예를 도시하는 기술력 curve



7) 국정브리핑 자료, 공감코리아 'CNN도 극찬한 기술 한국 ... 로열티 버는 나라로' (2007년 12월 31일)

8) MBC 뉴스데스크 (2008년 8월 18일)

9) 문화일보 '특허권 사용 로열티 51억 달러 사상최대' (2010년 10월 7일)

3. 구슬이 서 말이니 꿰기만 하면 보배인가?

정답은 '아니다' 이다.

흔히들 우리나라는 '특허강국' 이므로 전국 여기저기 널려있는 발명과 특허만 주어와 상용화하면 로열티수지를 흑자로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들 말한다. 정부 정책 역시 이러한 가정에 기초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가정에 기초한 잘못된 예측이고 잘못된 정책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구슬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나, 기실 그 구슬은 '진짜 구슬' 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그 구슬이 '진짜 구슬' 이었다면 우리나라의 해외로열티 지급액은 해마다 감소했어야만 하고, 로열티수지 역시 이미 흑자로 전환되었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구슬은 대부분 집으면 부스러지는, 허약한 불량 구슬(기술성이나 상업성 검증 없이 업적용으로 특허 출원된 발명)이다. 꿰려하면 부스러지는 구슬을 아무리 꿰다 한들 보배가 될 리 없다. 오히려 실과 수고만 낭비할 뿐이다. 가끔 집어도 부서지지 않는 구슬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들은 가운데 구멍이 없는 구슬(국내에만 특허 출원된 우량 발명)이다. 그러나 공깃돌로나 쓸 수밖에 없는, 보배가 되기에는 애당초 불가능한, 태생적 한계를 지닌 구슬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구슬강국이라고 오판하며 다급히 뛰어난 '보배만들기대회' 같은 거국적 사업은 재검토해야 한다. 왜냐하면 보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로열티를 지급하고 다른 나라에서 구슬을 사오거나, 더 많은 로열티를 지급하고 구슬찍는 기술을 배워와 구슬을 만들고 꿰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배를 만들면 만들수록 그만큼 해외로열티 지급액이 증가하고 로열티수지 적자 역시 늘어나게 된다. 흑시라도 이미 '보배만들기대회' 를 시작했다면 대회 참가자 규정, 운영 규칙 등 모든 것을 재고하여야 할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구슬을 꿰 만큼 우리나라가 외화를 획득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0.82' 에 달하는 수출량 대비 로열티 지급 상관계수를 유지하는 한, 우리는 기울인 노력만큼의 혜택을 누리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어찌면 구슬을 만드는 유리 원가와 인건비를 빼고 나면 손해보는 장사를 해왔는지도 모른다. 이것이 그 동안 우리가 해왔던 일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보배만들기대회' 를

포기해야만 한다는 말은 아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우리도 꿰기만 하면 보배로 변하는 구슬을 많이 만들고 싶고, 또 만들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왜냐하면 quantum jump가 없는 한, 우리의 미래는 과거의 연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하면 불량 구슬밖에 만들 수 없음을 우리는 되새겨야 한다. 같은 이치로, 그 동안 해온 것을 두세 배로 열심히 하게 되면 불량 구슬을 두세 배로 더 많이 만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는 그 누구도 구슬을 만들지 않게 될 것이라는 처절한 사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Quantum jump 없이는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 바로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만 우리도 quantum jump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미래의 우리는 과거를 연장한 우리가 아니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수익을 직접 챙기고, 더 나아가 구슬에 IP를 접목함으로써 노력한 이상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까? 정답은 아주 간단하다. '기본' 을 갖추어야 한다. 즉 지식기반 시대의 변화한 패러다임에 적응하도록 안팎으로 '기본' 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지식기반 시대의 '기본' 이며 어떻게 이러한 '기본' 을 갖출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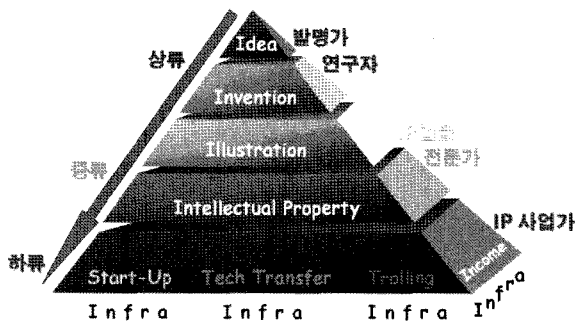
제4장 지식기반 생태계 구축의 당위성

IP의 창출에 역점을 둔 선순환적·역동적 지식기반 생태계 구축이 유일한 해답이다. 왜냐하면 지식기반 시대의 기축통화인 IP는 창출·권리화·활용 등 유기적·상호의존적 단계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즉 지식기반 생태계의 각 단계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동시에 선순환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므로 창출 없는 권리화·활용은 애당초 불가능하고, 권리화 없는 창출·활용 또는 활용 없는 창출·권리화는 비합리적이며, 지식기반 생태계 각 단계가 역동적·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 생태계가 선순환적으로 발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정책 역시 생태계 상류 육성에 역점을

돈 선순환적·역동적 지식기반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산·학·연은 물론 개인 발명가들도 선순환적·역동적 지식기반 생태계의 일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선순환적·역동적 지식기반 생태계를 떠받치는 IP 인프라를 확립할 수 있도록 IP에 대한 인식 제고는 물론 각종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선결과제이어야만 한다.

생태계(生態系)란 상호작용하는 유기체들과 그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주변의 무생물 환경을 묶어서 부르는 말이다. 같은 곳에 살면서 서로 의존하는 유기체 집단이 완전히 독립된 체계를 이루면 이를 '생태계'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말은 곧 상호의존성과 연결성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는 데 꼭 필요한 요소라는 뜻이다. 특정 생태계 안의 유기체들은 먹이사슬을 통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먹이사슬을 통해 영양분이 여러 유기체에 걸쳐 순환하고 에너지도 같이 이동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다양한 생태계가 생겨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생물생태계의 경우, 균류, 조류, 식물 등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광합성을 통하여 영양분과 에너지를 창출한다. 초식동물은 이들을 섭취하고, 소형 육식·잡식동물은 초식동물을 섭취하며, 대형 육식·잡식동물은 초식동물, 소형 육식·잡식동물을 섭취하여 영양분과 에너지를 얻는 생태적 피라미드를 구성한다.

그림 2. 지식기반 생태계를 도식화한 지식재산 피라미드© (IP Pyramid©)



지식기반 생태계 역시 상류·중류·하류의 다양한 단계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은 물론 이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주변 환경인 IP 인프라로 구성되는 데, 이러한 지식기반 생태계를 간단히 도식화한 것이 위의 그림 2의 'IP 피라미드'이다.

1. 지식기반 생태계 상류 = 발명가 + 창출

지식기반 생태계 상류의 키워드는 '발명가'와 '창출'로서, '발

명가'에 의한 IP '창출'이 그 속성이다. 생물생태계 상류의 유기체는 생태계에 공급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생태계 존재의 근거가 되는 영양분을 창출하여 중류로 전달한다. 마찬가지로 지식기반 생태계 상류에서는 발명가가 자신의 창조력이라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지식기반 생태계의 영양분인 IP를 창출하여 중류로 전달한다. 따라서 지식기반 생태계 상류는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IP를 창출하는 발명가가 담당하며, 발명가는 신규성과 진보성 등 각종 특허요건을 겸비한 idea의 착상 및 구체화를 통하여 IP를 창출하게 된다.

2. 지식기반 생태계 중류 = 전문가 + 권리화

지식기반 생태계 중류의 키워드는 '전문가'와 '권리화'로서, IP법률 '전문가'에 의한 IP의 '권리화'가 그 속성이다. 생물생태계 중류의 유기체는 생태계 상류로부터 전달되는 영양분을 섭취한 후 이를 다른 형태의 영양분으로 변환하여 하류로 전달한다. 마찬가지로 지식기반 생태계 중류는 상류의 발명가가 창출한 발명 상태의 IP를 권리화된 IP로 변환하여 하류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지식기반 생태계 중류는 특허제도를 이용하여 IP를 권리화하는 IP법률 전문가가 담당하며, 이들은 특허권 설정을 결정하는 특허청을 상대로 상류로부터 전달 받은 발명 상태의 IP를 권리화된 IP로 변환한다.

3. 지식기반 생태계 하류 = 사업가 + 활용

지식기반 생태계 하류의 키워드는 '사업가'와 '활용'으로서, IP '사업가'들 간의 적자생존의 원리에 입각한 IP '활용'이 그 속성이다. 육식동물, 잡식동물 등과 같은 생물생태계 하류 유기체의 경우, 생태계를 지배하는 환경과 자연법칙에 잘 적응한 유기체는 살아남는 반면 이에 적응하지 못한 유기체는 멸종에 이르는 것이 바로 '적자생존'의 원리이다. 지식기반 생태계 하류에서도 '적자생존' 원리가 작동한다. 즉 지식기반 생태계 상류에서 영양가가 높게 창출되고 중류에서 충분히 권리화된 IP를 받은 후 IP

관련 제도에 따라 이를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IP 사업가는 수익을 창출하며 번성하는 반면, 영양가가 낮고 권리화도 미흡한 IP를 받아 활용하는 IP 사업가는 이에 적응하지 못하고 멸망을 맞이하게 된다.

4. 지식기반 생태계 인프라의 중요성

지식기반 생태계의 상류·중류·하류를 둘러싸며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주변 환경인 IP 인프라의 키워드는 '인식'과 제도, 즉 IP에 대한 생태계 구성원의 '인식' 및 이를 반영하는 '제도'이다. 기후, 수분, 토양 등과 같은 주변 환경이 우호적인 경우, 생물생태계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왕성한 번식을 통하여 넓은 면적에 걸쳐 번성할 수 있다. 반면 주변 환경이 열악한 생물생태계는 좁은 면적에 국한되며, 멸종 위기에 처한 극소수 생태계 구성원들은 좁은 생태계 안에서 처절한 생존경쟁을 거칠 수밖에 없다.

IP 인프라 역시 마찬가지이다. IP 인프라가 IP에 우호적인 생태계에서는 상류의 발명가들이 역동적 창조 활동을 통하여 무수히 많은 양질의 IP(즉 퀘기만 하면 보배로 변하는 구슬)를 창출하고, 중류의 IP법률 전문가들은 IP를 효율적으로 권리화하며, 하류의 IP 사업가들은 효율적으로 권리화된 양질의 IP를 이용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또 하류에서 창출된 수익은 정당한 보상의 형태로 상류의 발명가들에게 지급되며, 이에 따라 발명가들은 더 많은 IP를 재창출하는 '선순환'이 계속된다.

반대로 IP 인프라가 IP에 비우호적인 생태계에서는 상류의 발명가들은 창조적 활동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보장받지 못하므로 발명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이에 따라 양질의 IP가 아닌, 겉모양만 갖춘 부실한 IP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중류의 IP법률 전문가들 역시 자신들의 전문적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보장받지 못하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욕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따라 부실하게 권리화된 IP를 양산하게 된다. 그 결과 하류의 IP 사업가들은 내용도 없고 권리화도 부실한 IP를 넘겨받게 되므로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1) IP 성격에 대한 생태계 구성원 인식의 중요성

IP의 성격에 대한 지식기반 생태계 구성원들의 인식은 IP 인프라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즉 구성원들이 IP를 창조적 활동의 결실로 또 전향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지하는지, 아니면 IP를 공유재산 정도로 인지하는지는 지식기반 생태계 번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왜냐하면 소수의 창조적 인재들이 창출한 IP를 다른 구성원들이 중요시하고 보호하는 생태계에서는 IP 창출이 왕성하므로 IP 축적양도 풍부해지고 IP 창출 속도 역시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적법한 보호를 받는 우량의 IP를 보유한 지식기반 시대의 '적자'인 동시에 '강자'로서 동 시대를 견인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구성원들이 IP를 공유재산 정도로 인식하여 공유하거나 공유를 중용하는 생태계에서는 IP 창출이 급격히 억제되고 따라서 IP 축적량 역시 빈약해진다. 왜냐하면 IP 보호가 미흡하거나 IP를 구성원들이 대가 없이 또는 값싸게 사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 정도로 인식하는 풍토에서는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IP를 창출하려는 발명가는 멸종 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지식기반시대의 '약자'로, '열성 구성원'으로 전락하여 지식기반시대 강자의 군림을 지켜보며 모진 생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2) IP 활용에 대한 생태계 구성원 인식의 중요성

IP의 성격에 대한 구성원간의 인식만큼 중요한 IP 인프라는 자신이 살고 있는 생태계의 경계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이다. 생물생태계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태양이 지구 바깥에 있다고 이를 거부하는 생태계는 자신에게 공급되는 에너지를 부정하는 격이므로 급격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생태계에 안주하여 외부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지 않는 생태계는 자원 고갈, 근친상간에 의한 열성 인자 출현 등으로 필연적으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지식기반 생태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생태계에서 만들어진 IP는 자신의 생태계 안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국수주의적 발상에 근거한 생태계 역시 근친상간, 약육강식 등의 부작용으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3) IP 관련 제도의 중요성

IP 인프라 구성 요소 중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특허출원 인프라 및 특허침해에 대한 보상 관련 제도이다. 제아무리 IP를 존중하고 보호하려 하여도 이를 뒷받침해주는 제도가 미비하다면 IP의 존중과 보호는 애당초 불가능하다. 즉 IP가 지식기반시대의 기축통화이고 IP는 공유재가 아니므로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타인의 지식재산을 도용한 침해자를 육하는 특허권자에게 “같은 생태계 구성원들끼리 다투는 것은 천박하지 않느냐” 또는 “우리가 남아냐”고 핀잔을 준다거나 이러한 침해자에게 경범죄 수준의 낮은 벌금형을 선고하는 생태계에서는 IP 창출이 급격히 억제되고 따라서 IP 축적량 역시 빈약해질 수밖에 없다. 다행히 (또는 불행히) 특허 출원 관련 제도 및 침해 보상 제도는 지식기반 생태계의 상류·중류·하류에 영향을 주는 주변 환경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당해 생태계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따라서 구성원들의 의지에 따라 특정 생태계가 변성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멸종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5. 역동적·선순환적 지식기반 생태계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식기반 생태계는 어떤 모습이며 어떻게 이러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 정답은 간단하다. 계속 진화하고 있는 지식기반시대에서 항상 변하지 않는 기본적 패러다임을 숙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역동적으로 IP를 창출하고 이를 선순환적으로 이용하여 지식기반 생태계 전체가 변성하도록 도모하여야 한다. 단 균류, 조류, 식물이 광합성을 거부하는 생물생태계가 멸망의 운명을 피할 수 없고 이들이 양성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생물생태계는 변성할 수 있듯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식기반 생태계 역시 생태계 상류의 발명가들이 역동적으로 IP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선결조건일 것이다.

6. 지식기반시대의 기축통화는 제품이 아닌 지식재산

지식기반시대는 이전의 산업자본시대와 비교하여 몇 가

지 근본적 차이점이 있다. 우선 산업자본시대의 기축통화는 유형자산인 ‘제품’이었으므로 동 시대의 생산자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한 제조업체였고, 소비자는 이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일반 대중이었다. 이에 반하여 지식기반시대의 기축통화는 무형자산인 IP, 즉 지식재산이다. 따라서 지식기반시대의 생산자는 기축통화인 IP를 창출하는 발명가이고, 소비자는 이러한 IP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이다. 즉 지나간 시대의 생산자 역할을 담당해왔던 제조업체는 이제 새 시대를 맞이하여 소비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두 시대의 기본적 패러다임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지식기반 생태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아직도 산업자본시대의 제조업 패러다임으로 지식기반시대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 징후가 여러 곳에서 포착된다. 즉 이미 지나간 산업자본시대의 생산자가 새로 도래한 지식기반시대에서도 생산자인 것으로 착각하고 이들을 육성하려고 전력투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착오를 시정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지식기반 생태계는 새 시대의 기축통화인 IP를 창출하는 생태계가 아니고 이를 소비하기만 하는 생태계로 전락할 것은 필연적 귀결이라 하겠다. 그 결과 우리는 지식기반시대의 후진국으로 자리매김함은 물론 지식기반시대의 선진국에 IP를 구걸하며 구차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 자명하다.

7. 상류 없는 중류·하류는 沙上樓閣

지식기반시대의 기축통화가 바로 IP이기 때문에 지식기반시대의 가장 중요한 분야 역시 IP 창출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IP 창출은 지식기반 생태계 상류에서 발명가가 담당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지식기반 생태계 상류의 흥망은 지식기반시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 지표이다. 따라서 특정 지식기반 생태계의 흥망은 생태계 상류의 발명가가 얼마나 많은 양질의 IP를 창출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책의 대부분은 IP 창출에 대한 고찰 없이 지식기반 생태계 중류 및 하류의 육성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러한 발상은 ‘우리나라는 세계가 알아주는 특허강국’이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잘못된 가정이다. 따라서 생태계 상류에서의 IP 창출에 대한 고찰 없이 중류 및 하류의

육성에만 집중한다면 沙上樓閣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다.

이는 마치 축구선수 육성에는 무관심한 채 국제수준의 축구경기장을 전국에 수십 개 건설하고 국제수준의 심판을 수백 명 양성하는 것과 같다. 또는 아무리 땅을 파도 다이아몬드 한 톨 안 나오는 우리가 다이아몬드 세공사를 수백 명 양성하고 전국 10개 도시에 다이아몬드 아웃렛을 상설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물론 급하면 용병을 불러다 국가대표축구팀을 구성하고, 항공편으로 급히 다이아몬드를 수입하면 된다. 하지만 이는 정석이 아니다. 용병들로 구성된 국가대표축구팀이 월드컵에서 우승한들 감격에 겨워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고, 용병들이 인천공항에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순간 우리나라 축구경쟁력은 다시 낙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또한 전량 수입한 다이아몬드를 장인정신으로 세공하여 아무리 판매한다한들 그 이윤은 박할 것이다. 오히려 국내 축구선수들은 더욱 얇아지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 국제무역수지 적자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지식기반 생태계의 중류와 하류는 무시한 채 상류만 육성하는 정책은 어떨까? 10년에 한 번 원천특허 기술을 발명할 발명가를 10명 육성하면 어떻게 될까? 결과는 뻔하다. 우리나라도 매년 1개씩 원천특허를 창출할 것이다. 이러한 발명가를 100명 육성하면 어떻게 될까? 매년 원천특허가 10개씩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들을 모아 10년이 아니라 매년 한 개씩 원천특허 기술을 발명하도록 육성하면 어떻게 될까? 매년 100개씩의 원천특허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럼 쏟아져 나오는 원천특허는 어떻게 하면 될까? 정안되면 외국에서 권리화하고 외국의 IP 사업가를 통해 활용하면 된다.

물론 우리 발명가가 창출한 원천특허를 우리 IP법률 전문가가 권리화하고 우리 IP 사업가가 전 세계를 무대로 활용하는 것을 최선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도 순서가 있는 법이다. 즉 상류는 무시하고 하류나 중류만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정책은 용병을 고용하고 다이아몬드를 수입하는 것과 동일한, 실현되더라도 아무런 실효성 없는 비현실적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에 비하면 하류나 중류보다 상류에서의 IP 창출에 역점을 두는 것이 월등히 높은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상류에서의 IP 창출에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하는 방법은 우리나라 지식기반 생태계의 선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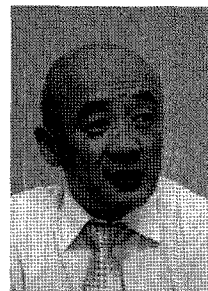
적 발전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이다.

8. 지식기반 생태계 구축은 상류의 창출부터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식기반 생태계의 상류·중류·하류 및 IP 인프라를 모두 육성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도 순서가 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지식기반 생태계의 각 단계들이 상호 의존적·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상류 없는 생태계의 존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더욱 생태계 상류·중류·하류 중 그 으뜸은 바로 '상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중류·하류 없는 '상류'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상류' 없는 중류·하류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의미조차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류를 무시하거나 또는 상류는 이미 정비되었다고 오관을 하고 중류나 하류에 온 힘을 쏟는 정책은 잘못된 가정에 근거한 비합리적 정책인 동시에 우리나라 지식기반 생태계 현황을 완전히 무시한 비현실적 정책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지식기반시대를 맞이하여 범국가적으로 추구해야 할 해답도 동일하다. 결국 지식기반 생태계 상류에서 역량 있는 발명가들을 육성하여 IP 창출을 최대화하도록 패러다임을 재정립하고 이를 보장할 수 있도록 IP 인프라를 정립한 후, 이를 중심으로 중류·하류를 정비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지식기반 생태계 상류에서 역동적으로 창출된 IP를 생태계 중류로 원활히 전달하여 세계 주요 국가에서 효율적으로 권리화하며, 권리화된 IP를 다시 생태계 하류로 원활히 전달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활용을 통하여 창출한 수익 중 상당한 부분을 다시 상류로 전달하여 발명가들이 더욱 역동적으로 IP를 재창출하도록 유도하여 선순환적 지식기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심영택

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교수 겸 개인발명가
Intellectual Ventures Korea 지사장
미국 특허 로펌 Fish & Richardson 및 Penne & Edmonds 근무
미국 Duke 대학교 공학박사 및 법학박사
KAIST 화학공학 석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 학사